

공 개



의안번호	제 212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0. 1. (제 18 차)

의
결
사
항

(주)코디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10. 1.

1. 의결주문

(주)코디의 제17기(2015.1.1.~2015.12.31.)부터 제19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안을 별지1,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코디의 제17기(2015.1.1.~2015.12.31.)부터 제19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주)코디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 '15년 4,548백만원, '16년 5,642백만원, '17년 1분기 4,982백만원)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16년 ~ '17년 3분기 4,092백만원)
조치 내용 <small>*1,*2,*3,*4</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과징금 308.3백만원*5감사인지정 2년*6

*1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중과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에서 공동약정 및 공동지배력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 주식 추가 취득 후 공동기업 합작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동지배력 변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명목상의 지분만을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대상인 공동기업을 연결대상에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기업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1)]

나.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중과실

- 본건 관련 업무집행지시자인 ○○○이 회사가 (주)○○○○○○○○에 지급한 (주)○○○○○○ 지분 매입자금 중 58.8억원을 회사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 등 회사의 경영진이 (주)○○○○○○의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 (주)○○○○○○ 지분과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 재무 상태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음에도 6개월 전의 거래가격에 비해 3~4배 높게 인수하였으나,
- 회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의 향후 매출을 과대추정하고, 향후 비용을 과소추정하는 등 동사의 지분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인수하였고,
- (주)○○○○○○ 지분 취득 18일 만인 '16년 기말에 동 지분 관련 영업권 92억원(총 취득가의 50%)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액 손상 인식한 점으로 볼 때,
- 횡령*을 목적으로 (주)○○○○○○의 기업가치를 고의적으로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단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등에 의한 횡령·배임 가능성이 확인되어 수사참고사항으로 검찰에 既송부('20.9.18.)

⇒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2.가.2)]

<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과실

- (행위판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공동약정 및 공동지배력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공동기업 합작계약의 변경에 따른 공동지배력 변동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계처리기준 적용과정에서의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 (정보의 중요성 기준) 위반금액의 규모배수*가 4배이하**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로 보기 어려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

*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적용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

** '15년 0.83배, '16년 1.98배, '17.1분기 1.36배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나.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중과실

- (행위판단 기준) 본건 관련 업무집행지시자인 000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가 (주)00000000에 지급한 (주)000000 지분 매입자금으로 상환한 정황이 있는 등 회사의 경영진이 (주)000000의 지분 가치를 과대평가할 유인이 존재하고,
 - 회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000000의 향후 매출을 과대추정하는 등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위반동기를 고의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회계처리기준 적용과정에서의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 (정보의 중요성 기준) 위반금액의 규모배수가 4배를 초과*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1)]

* '16년 8.22배, '17.1분기 8.50배, '17.반기 7.55배, '17.3분기 8.63배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현행 양정기준 적용) : 최종 가중·감경 없음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2단계 감경(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사.'에 해당하고,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내부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므로 2단계 감경[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자.]

-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사.]

구분		해당여부검토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 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가 파악됨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함)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소규모 종속회사로 동 지적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음

- 보간법을 사용하여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의 감경사유를 적용한 결과 최종 감경효과 없음

*4 조치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5 과징금 산정근거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 308.3백만원

- 조치근거 : 「자본시장법」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항 제1호 및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6 조치근거 : 「외부감사법」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제1항 제4호,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1항

나.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6년 5,642백만원) ○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연결: '16년 4,092백만원)
조치 내용 <small>*1,*2,*3,*4</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과실 II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 ※ 지정제외점수 20점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 단계)['16년 주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회사감사 업무제한 1년 -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 공인회계사 OOO(과실 II→III 단계)*5['16년 보조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고 - 직무연수 2시간

*1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이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수준보다 낮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을 적용

*2 동기판단

<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중과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에서 공동약정 및 공동지배력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 감사인이 실질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동기업 합작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1),3)]

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감사인은 무형자산 평가 시 매출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 검토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 사업결합 대상 종속회사의 연구실 실사 및 임원 면담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재무수치를 확인하고,
 - '16년 감사 시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전액 손상처리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인수가격배분보고서 평가자(회계법인)에 질문서를 발송하여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평가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및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일부의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였으나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실’로 판단 [舊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III.3.나.3),4)]

<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행위판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공동약정 및 공동지배력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공동기업 합작계약서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의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에 해당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1)]
- (정보의 중요성 기준) 위반금액의 규모배수*가 4배이하(1.98배)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로 보기 어려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
- * ‘연결재무제표 또는 연결감사보고서에 대한 양정기준 특례’적용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

⇒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서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나.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과실

- (행위판단 기준) 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전액 손상 처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인수가격배분보고서 평가자에게 질문서를 발송하는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가.3)]
 - (정보의 중요성 기준) 위반금액의 규모배수가 4배를 초과(8.22배)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나.1)]
- ⇒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실’로 판단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I.2]

*3 기본조치의 가중·감경(현행 양정기준 적용) : 최종 가중·감경 없음

- 가중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감경사유 : 2단계 감경(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사.’에 해당하고, 회사 재무제표의 단순합산 금액에서 내부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미만이므로 2단계 감경[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자.]
-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그 위법동기가 고의가 아닌 경우[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I.2.사.]

구분		해당여부검토
1)	누락 또는 잘못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주요 재무 정보가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파악되지 않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가 파악됨 (연결재무제표 주식에 공시함)
2)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퇴출요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연결 범위 결정 첫 해에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유의적으로 악화되거나 적자반전,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되는 경우	소규모 종속회사로 동 지적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음

- 보간법을 사용하여 “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의 감경사유를 적용한 결과 최종 감경효과 없음

*4 조치근거

- ○○회계법인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3항
- 공인회계사 : 「외부감사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제4항, 「외감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제4항

*5 보조책임자의 경우 주책임자보다 1단계 낮게 조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VII.2.]

4. 참고사항

가. 제11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9.16.)

나. 관계법규 (붙임1)

※ 금융감독원장이 안전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주)코디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코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코디

- 대표이사 : 000, 000(각자대표이사)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00 000, 00 00 0000(000, 00 00 00)

2. 조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등에 의하여

- (주)코디에 과징금 308,300,000원을 부과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27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 (주)코디는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퇴직자인 前 업무집행지시자 000, 前 각자대표이사 000과 000의 위법사실을 회사에 통보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코디(이하 '회사')는 제17기(2015.1.1.~2015.12.31.)부터 제19기 3분기(2017.1.1.~2017.9.30.)까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 : '15년 4,548백만원, '16년 5,642백만원, '17년 1분기 4,982백만원)

- 외국 기업 OOOOOOO와 공동으로 2015.4.30. OOOOOOOOOO(주)(이하 '공동기업')를 설립한 후, 2015.7.25. 공동기업 주식 1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형식적으로는 공동기업 발행주식총수의 과반(50%+1주)을 소유하였으나,
- 주식 추가 취득 시 공동기업 합작계약을 변경하여 공동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양 주주가 계속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 공동기업을 종속기업으로 잘못 분류하고 연결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매출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 '16년 ~ '17년 3분기 4,092백만원)

- 2016.12월 (주)OOOOOO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면서,
- 동사의 신약 연구 관련 제품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인 근거없이 추정하여 일부 예상매출을 과대평가하고, 일부 임상비용을 누락함으로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제164조, 제426조, 제429조 및 제43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 별표 제2호
 -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및 제56조,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 제25조의2, 별표 제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1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문단 4, 7, 24 등
 -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33 등
 -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하여야 하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 하여야 함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000,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 0000 00

☐ 000 [제18기('16년) 주책임자]

- 생년월일 : '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 000, 0000 00

☐ 000 [제18기('16년) 보조책임자]

- 생년월일 : '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소 : 000 000 00000, 0000 0000

2. 조치내용

-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27조, 부칙2조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은 (주)코디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2016회계연도(2016.1.1.~2016.12.31.) 감사보수액의 20%를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고,
- (주)코디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부터 2023회계연도(2023.1.1.~2023.12.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제외점수 20점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4항, 제27조, 부칙 제2조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은 (주)코디의 2022회계연도(2022.1.1.~2022.12.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고,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6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며,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정기연수 이외의 직무연수를 2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OO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주)코디(이하 ‘회사’)의 제18기(2016.1.1.~2016.12.3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음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 5,642백만원)

- 회사가 주주 간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기업(OOOOOOOOOO(주))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잘못 포함하였음에도,
- 회사의 공동기업 주식 1주 추가 취득이 공동기업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 4,092백만원)

- 회사가 2016.12월 (주)OOOOOO에 대한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였음에도,
- 무형자산 평가 시 사용된 매출액 추정 관련 합리성 검토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나. 근거법규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舊「회계감사기준」 200, 500 등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및 제54조 등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직무연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경고 또는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법행위의 중요도, 조치등의 가중·감경을 별표 7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별표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함

(붙임1)

관 계 법 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 4. <생 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 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 ~ 5. <생 략>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 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 4.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③ <생 략>

-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⑦ <생 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 1.~6. <생 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 8.~20. <생 략>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회계처리기준의 적용)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 7. <생 략>
- ② <생 략>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 ③ <생 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3.~5. <생 략>

③~⑧ <생 략>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및 결합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생 략>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4. <생 략>

② <생 략>

③ 증선위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 (조사)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에 의한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①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삭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③ 삭제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고, 당해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담당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책임자에게 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 행위 당시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중 다음 각 호의 자가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3.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② <생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 삭제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 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삭제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전까지 당사자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3., 2010. 5. 27.>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본조신설 2006. 9. 13.]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 ③ <생 략>

④ 조지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 나. 주권상장법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사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 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 ⑧ <생 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⑦ <생 략>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등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 ③ <생 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조치등의 일시
-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 략>

부칙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등, 금융위원회에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5. <생 략>

[부칙 <제2019-13호, 2019.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 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 (별표 제1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제40조(사전통지)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그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 내용,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② 법 제15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제175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2.~4. <생략>

② <생략>

□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과 대손

- 58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은 각각 문단 63, 66 및 67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 59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

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이다. 손상을 초래한 단일의 특정 사건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여러 사건의 복합적인 결과가 손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아무리 발생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보유자의 주의를 끄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된다.

-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3)~(5) 생략
- (6)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 「회계감사기준」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17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500. 감사증거

- 1 이 감사기준서는 재무제표감사에서 감사증거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는 감사인의 책임을 다룬다.
- 2 이 감사기준서는 감사의 진행 중에 입수되는 모든 감사증거에 적용한다. 감사의 특정한 측면(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315), 특별한 주제와 관련하여 입수되어야 하는

감사증거(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70), 감사증거를 입증하기 위한 특정절차(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20), 그리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감사기준서 200과 감사기준서 330)는 다른 감사기준서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조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320